

의안번호	제 277 호
의결년월일	1996. 3. 30

의결 사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문

제안자	내무위원회위원장
제안년월일	1996. 3. 28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문

의안 번호	277
----------	-----

제안년월일 : 1996년 3월 28 일

제안자 : 내무위원회 위원장

1. 주 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최근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독도를 포함한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한 것은 영토확장 야욕을 드러낸 일본 정부의 계획된 도발과 망령으로 이는 우리의 주권을 침해한 야만적인 발상이며 도전행위로 보아 독도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우리의 주권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일본정부의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다시는 이러한 망언과 도전적인 발상을 하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문

일본정부는 최근 역사적인 면으로 보나 국제법상으로 보나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가 명백한 데도 우리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망언을 일삼아 오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는 하시모토 일본 총리와 이케다 외상을 비롯한 일본 정부가 독도가 자기네의 영토로 포함되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전면적으로 설정한 것은

부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패권주의와 영토 확장 야욕을 드러낸 전 근대적인 제국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힌 일본정부의 처사에 대하여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독도는 삼국시대에도 우산국등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많은 기록이 있고 조선조 숙종시 국제법상
조약에 의하여 일본정부 스스로도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밝힌 문서가 있는데도 독도를 자기 나라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일본정부의 망언을 규탄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구미시의회는 시의회 의원 및 31만 시민과
더불어 일본정부의 독도에 대한 망언적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일본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라.
- 일본정부는 금후 어떠한 망언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다시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지 않겠음을 재천명 할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 일본정부는 이러한 야만적이고 도전적인 발상을 즉각 중지하고 독도는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아님을 전세계에 밝히도록 하라.
- 정부는 우리의 주권을 침해한 일본정부의 망언을 명백한 선전포고 행위라 간주하고 보다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것을 촉구한다.
- 일본정부는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개 될 모든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일본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1996. 3. 30.

구 미 시 의 회 의 원 일 동